

- 다만,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(47개 세항목 공개)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(21개*)만 공개하도록 하였다.

* 21개 항목 : 관리비(일반관리비·청소비·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), 사용료(전기료·수도료 등 9개 항목), 장기수선충당금, 잡수입

-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'20.4.24.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.
 -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,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.
- ② 관리비, 회계감사의 결과, 공사·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.
-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,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(통로별 게시판 포함)에도 공개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등을 통보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,
-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.
- ④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 등에 따라 새로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,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하였다.
- 지금까지는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.

-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.

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.

- 지금까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, 비 내력벽 철거 및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(동의대상과 비율)이 서로 다르고,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했다.

<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행위허가 기준(예시) >

공사 내용	행위허가 유형	행위허가 시 동의요건
발코니 확장	비 내력벽 철거	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
설비 증설	증 설	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이상
개구부 설치	대수선	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

- 앞으로는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하여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하였고,

- 내력벽에 문·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, 동의요건을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.

⑥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된다.

-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을 허용*해 왔으나, 앞으로는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,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.

* 급식시설 기준 강화('10. 7. 시행, 소독시설 등 추가 설치)에 따라 이를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의 소폭 증축을 허용

- 아울러, 지금까지는 주민운동시설 등 일정용도의 주민공동시설만 용도변경을 허용하였으나,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입주민의 요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⑦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,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.

⑧ 한편, 이번 시행령·시행규칙과는 별도로 지난 4월에 개정·공포된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중 10.24.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지금까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했으나, 앞으로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,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,

- 지금까지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리주체가 공개하여 왔으나, 앞으로는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감사 감사인이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변경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“이번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,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□ 이번에 개정된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의 ‘정보마당-법령정보’에서 볼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종용 사무관(044-201-337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공동주택관리법령」 개정사항 Q&A

1.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의 차이점은 무엇인 지?

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개항목이 세항목 기준으로 총 47개 항목이나, 비의무관리 대상은 21개 항목으로 한정되며
- 의무관리대상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(통로별 게시판 포함),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모두 공개해야 하나, 비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시스템*에 공개는 생략하도록 함

* 관리비, 유지관리이력, 입찰정보, 회계감사보고서 등 공동주택 관리 주요 정보를 공개·운영 하는 시스템(국토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위탁운영)

2. 비의무관리대상의 관리비등 공개, 지자체장의 감사의 결과 등을 공개하는 장소에 “통로별 게시판”을 포함하고 있는 데, 이 경우 통로별 게시판의 의미는?

- A동 1·2호 라인에 지하주차장 및 1층에 게시판이 있고, 3·4·5호 라인에도 지하주차장 및 1층에 게시판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경우
- 1·2호 라인 및 3·4·5호 라인에 입주자등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각각 1개씩 게시하여 공개하면 됨

참고

관리비 등 공개 항목 구분

⇒ 비의 무관리대상은 “대 항목” 기준으로 21개 항목만 공개

구분	대항목	중항목	세항목				
공 용 관 리 비	1. 일반관리비	인건비	급여	제수당	상여금	퇴직금	산재보험
			고용보험	국민연금	건강보험	식대등	
		제사무비	일반사무용품		도저히쇄비		교통통신비
		제세공과금	전기료	통신료		우편료	제세공과금등
		피복비					
		교육훈련비					
		차량유지비	연료비	수리비	보험료	기타차량유지비	
		그 밖의 부대 비용	관리용품구입		회계감사비		잡비
	2. 청소비						
	3. 경비비						
	4. 소독비						
	5. 승강기유지비						
	6.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						
	7. 난방비(중앙난방)						
	8. 급탕비(중앙난방)						
	9. 수선유지비	수선비					
		시설유지비					
		안전점검비					
		재해예방비					
	10. 위탁관리수수료						
개 별 사 용 료	11. 전기료						
	12. 수도료						
	13. 가스사용료						
	14. 난방비와 급탕비 (지역난방)						
	15. 정화조 오물수수료						
	16. 생활폐기물 수수료						
	17. 건물보험료						
	18.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						
	19. 선거관리위원회운영비						
20. 장기수선충당금							
21. 잡수입							